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 회의

Voices for Just Transition in Chungnam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주민의 공론장 - 소들섬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 일 시 : 2023. 9. 6(수) 15:00 ~ 17:00
- 장 소 : 당진 우강면 하리 경로당

이 사업은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름  
인권재단사람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론장



## 송전탑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당진엔 이미 528기의 송전탑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새가 오가는 소들섬에 송전탑을 꼭 세워야할까요? 거대 '한전'의 폭력에 맞서 소들섬을 지키기 위해 9년째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 일시

2023. 9. 6(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당진시 우강면 부장2길 92  
하리 경로당

### 이야기 나눠주실 분

- 김학로 (소들섬대책위공동대표)
- 권중원(당진YMCA 사무총장)
- 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장)
- 유이계(부장리 철탑반대 위원장)
- 인권활동가와 석탄발전소 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https://justtransition.mixon.io>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이 지원합니다. (문의 010.5423.3914)

## 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30~15:00	30'	인사 나누기	
15:00~16:00	15'	송전탑 반대 주민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학로 (소들섬대책위 공동대표)
	15'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폭력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10'	우강면 주민들의 손을 잡다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장)
	10'	주민들은 왜 소들섬을 지키려 하는가?	유이계 (부장리 철탑반대 위원장)
	1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16:00~16:10	10'	휴식	
16:10~16:50	40'	질문과 답변 참여자 전체 이야기 나누기	
16:50~17:00	10'	마무리	



## 발표(1)

### 송전탑 반대 주민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학로(소들섬대책위 공동대표)

#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폭력

권중원(당진YMCA 사무총장)

## 1. 서론

거대한 자본력으로 공기업 한국전력의 국가산업기반 조성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배치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워 지자체, 환경청과 경찰의 공권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군부독재개발에서나 가능한 권력남용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민민갈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분열,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막강한 자본으로 법정재판 말 잘 듣는 주민들 보상 명분으로 매수하고 있다. 지자체에 발전 기금을 500억~1,000억 원 제시하기도 하고, 법률을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막무가네 식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진 사례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한전의 송전철탑 공사의 불법성과 인간에 미치는 해악성을 고발하고 자연생태계의 파괴행위를 개선하고 친환경적 공사에 대한 제시와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

## 2. 본론(현재 쟁점사항)

1) 북당진~신탄정구간 송전철탑 건설 관련 석문면 대책위는 1차 주민 간 갈등으로 새로운 대책위를 구성하여 당진시송전철탑대책위의 불신으로 독자행보를 하기도 했으며 신평면 대책위는 2018년 12월 말 대부분 송전탑 지중화 결정 합의로 활동을 중지하게 되지만 마지막 협상 단계인 우강면 대책위의 지중화 요구에 유독 한전과 당진시와 금강유역 환경청은 한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2) 한전의 불법(소규모영향평가 등) 공사중지 소송에 대한 한전이 행정소송을 했으나 1차 패소(2022년 11월 23일)하자 항소하여 2차심에는 대전법원은 1심판결 취소라는 유래 없는 판결을 한다.

3)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2022년 9월 5일)에서 공사구간 내 법정보호종 주요서식지 확인 시 즉각 공사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밝혔음에도 보호종이 발견되었거나 공사강행을 하였고,

4) 금강유역환경청은 법정보호종이 조류가 아니라서 공사중지를 한전에 요청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항의방문(2023년 4월 10일) 한 자리에서 8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앵무새처럼 공사중지 사유가 안 된다면 한전의 편을 들기에 급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삽교호 소들섬에 흰꼬리수리가 발견되었다는 조사에 시민대책위가 2023년 3월 15일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그 자료를 증거로 내밀었으나 공식적 조사가 아니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급기야 당진시에서 올해 3월 용역조사를 준 결과 검은머리물떼새, 새호리기 서식지 발견에 따른 지난 9월 1일 우강면대책위 마을주민과 소들섬시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한전과, 환경청과, 당진시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깊은 관심의 지점이 되는데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5) 한전의 부사장은 소들섬 구간 지중화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소들섬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면서 약 800억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얘기했다가 이후 지중화 불가론을 내세워 우강주민들을 실망하게 하였다.

6) 2020년 7월경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도부들은 우강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정확한 정보공유를 하지않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시위를 하면서 사실상 삽교호 횡단 교각설치가 왜 안 되는지를 묻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성명서 내용이 이상해서 유이계 대표가 몰래 성명서 1부를 호주머니에 숨겨가져 집에 가져오게 되었다.

7) 국토청에서 우강면 마을주민들의 주장과 뜻을 알기 위해 소들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중화 관철의 뜻을 직접 알게 되나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이봉기 대표에게 “절대로 지중화를 할 수 없다.” 큰소리로 화를 내기에 격하게 이견으로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하였다.

8) 2020년 7월 7일~7월 14일 굉장히 중요한 대책모임이 있었다(국토청 항의 시위방문, 소들섬 현장방문, 어기구 국회의원실에서 대책회의 등) 이는 환경단체와 당진시, 우강면 대책위 간의 한전의 모종의 분열 작업과 전략이었음이 들어났다. 솟벌섬, 무명섬(소들섬) 사이로 교각설치 경과지 변경안이라면서 괄호 지중화 표현-마을 주민 아산시가 경과지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마지막 협상이라며 환경운

동연합과 어기구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주는 척 교각 설치(아산시 반대) 지중화 대안이 성립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환경운동연합, 어기구 국회의원, 우강대책위에 경과지 변경안을 수용토록 압박했으나 거부한 것이다.

9) 대전국토관리청은 우강대책위 편을 들어 지중화 합의를 요구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무지한 것인지 정작 전략 실패인지 알 수 없으나 경과지 변경안을 고집했으나 우강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지중화에 동의하면서 소극적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다(이 사실로 현재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송전탑반대시민대책위 소속 13개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임)

10) 우강면 일대(철탑 34~39번)는 전원개발실시 승인(2015. 6. 22)이후 5년 이상 미착공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상, 소들섬 내 하천점용 허가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실시 안 한 것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을 완전 무시함(흰꼬리수리 등 평가 시 발견되지 않은 법정보호종 발견됨으로 공사중지요청 등 무시)

11) 이후 32번 철탑 39번(소들섬 철탑) 공사를 강행하고 철탑 38번~39번 송전선로 작업을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강행, 주민과 당진시민과 법체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끝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12) 기타

### 3. 결론 및 과제

- 1) 시민단체와 우강대책위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 강화론
- 2) 특별위원회 활동평가와 향후 역할, 야생생물보호위원회 활동의 방향과 성격 규정
- 3) 한전과 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의 끊임없는 항의방문과 지중화 주장 요청
- 4) 소들섬 야생생물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철새 모니터링을 통해 철탑지중화 명분 확보와 요구
- 5) 전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한 홍보 및 연대 요청
- 6) 소들섬 송전철탑 관련 조류 사체 등 자료축적을 통한 언론플레이, 국회 환노위 의원

## 설득작업 등 지속화

7) 한국사회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한전과의 가장 긴 싸움과 투쟁으로 오랜 여정을 통해 정의로운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사례의 필요성

8) 주민투쟁활동내용 기록, 각종 회의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한 소들섬 투쟁백서를 만들어 한전의 폭압과 횡포에 대해 역사적 기록의 보존 필요성

9) 기타



<참고자료>

## 우강면 소들섬 송전철탑 반대 관련 투쟁 일지

### <2011년>

2011. 7. 감사원에서 한전에 765kV 송전선로 고장에 대비한 보완 대책 마련하도록 통보(신뢰도 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2012년>

2012. 9. 345kV 북당진~신탄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발간

### <2013년>

2013. 4. 30.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3. 8.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송배전건설계획>에 송정선로 반영

### <2014년>

2014. 3.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산부 고시 2014-62호]

2014. 11. 동서발전과 한국전력이 건설비를 동일비율로 분담토록 재정 결정(산자부)

### <2015년>

2015. 4. 22. 공사착공[공사착공통보 2015. 05. 02]

2015. 6. 23. <한전중부건설처 당진건설>사무실 개소 (석문면 삼봉4리)

2015. 7. 14 석문면 교로2리 대책위 구성

### <2016년>

2016. 3. 11. 무명섬 이름짓기 제안 (김선태 우강면장).

2016. 7. 7.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현재 한전에서는 북당진~신탄정 간 345kV 송전선로에 대해 5.8km 지중화 계획안이나 송전선로의 당진구간은 38호 국도를 활용한 14.5Km 노선 및 육지노선 16.147Km를 따라 전구간 지중화 주민 요구함”

### <2018년>

2018. 5. 10. 송전선로 반대 석문주민들 석문면 사무소 앞 집회

2018. 6. 20. 기존 석문대책위원회 석문면 345kv 송전선로 t\건설 관련 한전과 협의내용 전면 백지화하고 대책위 해체

- 2018. 7. 18. 석문면 새 대책위 출범, 호명도, 조권형 공동대책위원장 선임
- 2018. 7. 23. 범대위, 문봉수 한전 부사장 면담. 문부사장 우강 부장리 인근 신평 신당리 제방 끝에서 솟벌섬과 무명섬 사이로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부 설득할 경우 지중화 가능 의사 밝힘.
- 2018. 8. 16. 한전공문-‘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에서 “신평면 신당리 구간 지중화 연장 요구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 할 수 없음”
- 2018. 8. 24.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문-당진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결과 대책 위 해석이 맞다고 회신
- 2018. 9. 12. 석문면 송전선로 추가건설 반대 세종시 집회, 새로운 석문면 대책위, 당진시 범 시민대책위 참여 및 연대활동에 미온적, 독자적 활동 추진
- 2018. 9. 14. 범시민대책위 상임위원장과 간담회 통해 한전 부사장 재면담 요구
- 2018. 10. 17. 범시민대책위 어기구 국회의원실에서 문봉수 한전 부사장 면담 문 부사장 “7월 면담에서 마무리하여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지중화 불가 결론”
- 2018. 10. 20. 당진화력 옥내형 저탄장에 보관중이던 2~3만톤 규모 석탄더미 자연발화로 유해가스 발생 교로리 주민들 구토와 두통증세 호소
- 2018. 10. 31. 우강, 신평대책위 면담: 우강대책위 측의 경우 한전의 지중화 불가 결론 수용 불가 의견, 신평대책위 측은 신당리 의견 수렴 후 판단
- 2018. 11. 19. 2018년 제2차 상임위·집행위연석회의-우강대책위, 신평면 지중화 구간이 끝나는 신당리에서 제방까지 900m 지중화 요구의 건(※한전입장: 신당리 지중화 구간 확대는 불가하나 신당리 지중화 끝 지점에서 삽교호까지 우강 부장리에서 최대한 이격)(17~18페이지 참조)

※2018년~2020년 사이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이하:당진송전탑시민대책위) 4차례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송전철탑 변경을 요청함

### <2019년>

2019년 말 한전을 갔다 온 후 1년 동안 환경운동연합과 범대책위에서 소식이 없음

### <2020년>

2020. 7. 7. 대전국토관리청 앞 규탄대회(환경운동연합, 마을주민 등)/ 결의문“일방적인 주민피해 강요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강력 규탄한다.”라는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범시민대책위 명목이 아닌 송전철탑 주민피해 강요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명목의 내용에 ...중략...삽교호 안에 송전철탑이 설치가 불가능한 법적근거를 달라고...중략...삽교호 안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교각과 서해안 복선전철 교각도 건설해서는 안된다. 도체 무슨 근거로 고속도로 교각은 되고 송전철탑만 안된다는 것인가?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와 철도 교각만 허용하겠다는 조직이기주의인가?...중략...(9~10페이지 참조)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인 황성렬과, 사무국장인 김정진씨가 결의문을 낭

독하여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유이계 대표가 결의문 1부를 호주머니에 넣어와서 지금까지 증거로 보관 중임

- 2020. 7. 10. 이후 우강면 대책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민과 합의한 내용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삽교호에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범시민대책위의 대안노선(송전탑 설치)을 폐기하고 삽교호 구간 전체를 지중화 요구하기로 당진환경련 결정함.(당진시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는 우강면 대책위와 수차례 만나 전체구간 지중화 어려우므로 솟벌섬과 소들섬 사이로 송전철탑 대안 노선 선택 설득에 우강면대책위 전체구간지중화 요구하여 우강면대책위 의견 수용했다고 당진환경운동연합 주장함
- 2020. 7.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손경복 국장 포함 3명과 우강면 주민 10여명이 소들섬 현장 방문하여 당진환경운동연합이 2018.부터 2020.까지 4차례나 찾아와서 솟벌섬과 소들섬 사이 철탑을 찍자고 해서 당시 주민의 뜻인 줄로 알았는데 소들섬 내사를 통해 지중화 요구를 알았다며 한전에 주민과 합의를 통해 허가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더라는 얘기를 해 줌(12페이지 참조-대전국토청 소들섬 내사 모습)
- 2020. 7. 10. 주민과 지중화 등을 합의하지 않으면 대전국토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는 공문을 한전에 발송함(우강면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문 한전에 발송:11페이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문 참조)
- 2020. 8. 14. 당진시(기후에너지과)가 아산시에 <우강면 구간(부장리-신촌리-소들섬-아산시) 삽교호 횡단구간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요구 의견조회 공문 발송(6페이지, 7페이지 참조)
- 2020. 8. 20. 아산시가 솟벌섬 인근으로 횡단하는 경과지 변경안은 절대 불가함 공문 보내옴
- 2020. 10. 14 김홍장 당진시장 면담 (2014년 당진땅 어디에도 철탑은 반대, 지중화 요구)
- 2020. 12. 1.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면담

### <2021년>

- 2021. 3. 15. 범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충청남도,당진시,한전,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송전선로 삽교호 구간 현안 해결을 위한 회의 개최(당진시청 앞 시위-우강대책위만 참석 시위를 벌임)
- 2021. 5. 14. 소들섬 주변 제방에 송전선로 지중화 홍보 깃발 설치(1회)
- 2021.7. 한전이 몇 년간 미착공상태였던 송전탑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커짐)
- 2021. 7. 12. 송전선로 공사 규탄 집회 현수막 제작 지원 등 노력함/ 우강 철탑 공사중단 집회 (유이계 대표 등 우강 주민 6명 구속)
- 2021. 9. 17. 소들섬 주변 제방에 송전선로 지중화 홍보 깃발 설치(2회)
- 2021.10~2022.10. (34~38번 철탑구간 공사 완료 예정)
- 2021. 11. 22. 송전선로 공사 방치 규탄 기자회견 참가

### <2022년>

- 2022. 1. 28. 소들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5개월만에 보호구역 지정됨)

2022. 3. 30.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통보  
2022.5. ~ 2023.5. (39번 구간 공사완료 예정)
2022. 5. 16. 당진시 공사중단 명령이 합당하다고 법원 판결 내림
2022. 7. 23. 송전선로 공사 강행 규탄 꺾기 대회 참석
2022. 8. 25.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 명령 촉구 기자회견 참가
- 2020. 9. 소들섬송전철탑반대시민대책위 발족(18개 시민단체 참여)**
2022. 9. 2. 소들섬 39번 철탑 기초공사 시작
- 2022. 9. 14.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무단 방류 규탄 시민단체 기자회견**
2022. 9. 16. 당진시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위원회에서 범종보호종 주요서식지가 확인되면 한전은  
즉각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함.
2022. 10. 4. 소들섬시민대책위가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관련 진입로 개발행위 허가건  
항의 및 수정요구> 당진시에 공문 발송
2022. 10. 8. 소들섬 철탑건설 반대 캠페인 및 자전거 행동 개최
- 2022. 10. 14.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 회의에서 소들섬 대책위 탈퇴 결정**
2022. 10. 19. 소들섬송전탑건설반대를 위한 당진시청 앞 천막 농성시작(2차)
2022. 11. 3. 당진지역 환경단체 설립을 위한 모임(2차 모임)
2022. 11. 5. 충남도의회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 채택
2022. 11 ~ 2023. 3. 조류조사 결과 총 33종에 28만여 마리 관찰(주용기 박사)
- 2022. 11. 23.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  
한다는 야생생물법 역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금전적 손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않다고 판결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2022. 12. 5. 33번, 34번 철탑 사이 송전선로 아래 추락사 청둥오리 발견
2022. 12. 20. 당진시의회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성  
명서 발표

## <2023년>

2023. 1. 12. 소들섬 대책위 오성환 당진시장 면담
2023. 2. 15. 소들섬 지중화를 위한 대책위 차량시위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도부와 환경오염 배출 피감기업인 술판 사건 발생
2023. 3. 3. 당진환경운동연합 술판 사건 규탄 기자회견
2023. 3. 6. 당진시대 술판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광고 냄
- 2023. 3. 15. 소들섬송전철탑건설반대시민대책위 기자회견(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 발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2023. 3. 31. 시민대책위 오성환 당진시장 면담
2023. 4. 3. 우강면 신촌리 38번 철탑 송전선로 공사 반대 집회 시작
2023. 4. 10. 소들섬시민대책위 금강유역환경청장 면담(공사 중지 요청-8시간 마라톤 회의)

2023. 6. 30.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진경찰서에 13개 단체 대표 13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2023. 7. 18.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
2023. 7. 28. 대법원 상고 함.
2023. 7. 31. 당진시청 천막농성 철거 기자회견(280일 간)
2023. 8. 8. 제1차 소들섬 송전철탑 관련 토론회 개최
2023. 8. 29. 제9차 소들섬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특별대책위(3/23 제1차회의)
2023. 9. 1. 소들섬 법정보호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새호리기 새로운 조류의 서식 발견 기자회견 개최
2023. 9. 6. 제2차 소들섬 송전철탑 관련 토론회 개최
2023. 9. 16. 피고소 단체인 13개 단체 대표 당진경찰서 조사 및 기자회견 예정

## 우강면 주민들의 손을 잡다

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장)

이름도 고운 ‘소들섬’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유이계 대표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였습니다. 당진에 소들섬이라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에 세워질 송전탑을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길고 긴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520여 개가 넘게 세워진 송전탑에 더해 또다시 지어지고 있는 한전의 불법적인 송전탑 공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자 했던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강면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는 긴 시간 동안 당진시의 시장도 바뀌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한전이라는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이 싸움에서 회유와 협박, 갈등과 대립을 겪어내며 버텨온 마을주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시작된 당진시청 앞 천막농성은 2년이 걸린다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을 단 5개월 만에 지정받을 수 있게 했고, 한전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당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변호사, 조류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주민들의 손을 잡고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걸음의 가장 상징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2023년 2월 진행했던 ‘송전탑 반대 차량행동’ 이었습니다. 120여대의 차량이 ‘송전탑 반대’, ‘소들섬 지키자’라는 깃발을 꽂고 당진시청에서부터 소들섬까지 차량들이 줄지어 행진하는 장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히 이날 부장리 부녀회 어머님들이 아리랑 가락에 송전탑 반대의 뜻을 담은 가사를 붙여 부르셨던 그 노랫소리는 지금까지도 가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름답던 소들섬엔 고압송전탑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우강면 주민

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함께 했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과정은 앞으로 수많은 당진의 사회적 문제들, 환경문제들의 투쟁 현장에서 돌아보게 되는 정의로운 기록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땅을 밟고 농사를 지어오셨던 농민들의 삶을 뿌리째 바꿔놓았던 송전탑들은 결국 지중화 될 것입니다. 손주 손녀들의 손을 잡고 보아왔던 철새들의 군무를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당진어울림여성회를 비롯한 당진의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의 걸음을 응원하고 함께 연대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부르셨던 아리랑 노래의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집 위에 농장 위에 송전탑 끄찍해. 제일 높은 철탑 밑에 어찌 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 주민들은 왜 소들섬을 지키려 하는가?

유이계(부장리 철탑반대 위원장)

당진시는 전국에서 생태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이다.  
삽교호는 국내 주요 월동 조류 서식지 중 하나이며, 국제 중요 서식지 기준 1을 상회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월동 조류 서식지이다.

삽교호는 람사르 사이트의 지정 기준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연간 2만 마리 이상의 수 종류 서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이곳은 큰고니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참매 흑두루미 흰꼬리수리 삿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아주 우수한 생태환경이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은 곳이다.

이런 소중한 곳에 2014년 송전탑 건설 계획이 세워졌다.  
그 이후로 평범했던 저희 부부는 농부의 삶에서 투사가 되어 9년의 시간을 보냈다.

소들섬은 1979년 삽교천이 막히면서 퇴적물에 의해 생겨 커진 섬으로...  
삽교호는 호수와 평야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평야이며, 곡창지대로 철새들의 낙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곳이다.

매년 4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 군무가 일품이고, 큰기러기 저어새 황새 큰고니 흰꼬리수리 황조롱이...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나온 새호리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 1급, 2급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에  
2014년 송전탑건설 계획은 평범했던 농부의 삶을 투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곳에 섬이 생겨나고 이름없는 무명섬으로 불려진다해도 철새들이 많아서 넓은 평야가 삭막할 겨울을 가치있고 풍요로우며 윤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철탑건설을 반대해 왔지만, 당진시의 미온적 태도와 행정조치가 문제로 제기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야생생물보호구역 주무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지역주민의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었다.

철탑공사 몇 개 가지고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고, '시화호도 철탑이 많다'며 환경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며, 고압송전탑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깊은 탄식과 분노가 느껴졌으며 이를 감당하기 매우 힘들었다.

이곳의 멸종위기 생물들이 많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또한 중요하다.

그만큼 자연의 가치가 무궁무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하여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라!

자연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러 살아갈 뿐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절대 우리의 것만이 아니며,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곳이다.

우리 모두는 책임있는 어른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남 주민의 목소리를 모읍니다!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긴 장마, 폭염, 느릿한 태풍....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불평등과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으로!

경제 성장이 탄소를 배출하게 했지만, 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진 않았 습니다. 1990년에서 2015년 동안 부유한 10% 사람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 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1% 사람은 인구 50%의 가난한 사람보다 두 배 이상 탄소를 배 출했습니다.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 탄소는 전 지구적으로 평등하게 증가했지만,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배출한 것이 아닙니다.

####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위험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 책임이 미약함에도 큰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지역과 나라들이 있습 니다. 어린이들은 기성세대처럼 배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데, 어 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 정치적 불평등으로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기후위험을 피할 수단을 마련하기 어렵고 재난에 내몰립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서로 얽혀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으로 인해 서로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누지 않아 일어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위기가 이 세상을 파국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 위에서만 우리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 수 있다."(조천호/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려 합니다.**

시민들의 주장과 요구와 다짐의 목소리를 모으고 연결하여, 시민의 힘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세상을 바꿉니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우물을 팍시다!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요!**

기후재난으로 농사를 망쳐 망연자실한 농민들 소식이 잦습니다.

충청남도에는 20만명의 농민이 있고, 전체 면적의 30%가 농지입니다. 점점 기후는 이상해지는데, 농민은 그저 하늘을 탓해야 할까요? 기후위기에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은 모든 사람의 먹거리와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올해 여성 농민에게 지원하던 행복바우처(연 20만원)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충청남도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있는데, 2025년 태안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기업으로 전기를 보내느라 지역주민은 수많은 송전탑과 고압선, 오염물질로 병을 얻고 고통을 받았고(여전히 그러하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당한 차별도 겪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의 답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1. 화석에너지 말고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까?
2.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대책은?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업정책과 직접 피해를 입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대책은?

#### 4.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데, 함께 살기 위한 대책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아무도 소외됨 없이 서로 돌보며 살자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이자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슬로건입니다. 우리에게 기후위기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누군가를 부정의한 피해자로 남겨두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선택에 고민이 되거나, 기타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온오프라인 캠페인으로 모은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 11월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 ①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비율을 높였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도 함께 높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은 대안이 아닙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에 의해 농촌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 ② 생태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기후농정 전환

땅이 인류를 구하리라! 농업은 대기 중의 탄소를 포집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강력한 대안이며, 농민이 생산하는 먹거리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생물다양성과 회복탄력성이 높고, 땅을 살려 탄소를 포집하는 소농과 생태농업을 지원하고, 농민에게 ‘기본적이고 공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농사는 물론 돌봄과 재생산노동까지 감당하는 여성농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는 곧 식량위기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모두를 지키는 기후농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③ 양질의 녹색일자리로 정의로운 노동 전환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약 2만 5천여 명에, 전국적으로 75조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터를 잃는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의한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양질의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로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④ 주민과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 에너지 전환, 산업전환은 당연하며,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농민, 어민,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실질적이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⑤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기후위기는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며, 기후재난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합니다. 이러한 기후불평등의 해결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은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롭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전환은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은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묻지마 전환’이 아닌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전환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⑥ 기후부정의 피해의 회복과 예방을 위한 기후정의안전망

기후부정으로 발생한 주민의 피해를 회복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기후정의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물과 식량, 에너지, 보건, 주거, 교통, 복지, 안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함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종합적인 인권 보호, 기후정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 캠페인 참여 : <https://campaigns.do/surveys/355>  
스마트폰 카메라를 그림에 가까이 대면  
열리는 창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